

나주 SRF 뒤늦은 해법찾기 나선 정치권

발전소 연료 안전문제 놓고 시-난방공사 갈등 격화 공은 항소심 재판부에...민주, 부랴부랴 대책 마련 분주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는 법원 1심 판결을 근거로 준공 후 3년여 멈춰섰던 SRF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으나, 나주시 측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SRF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연일 가동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측 갈등이 격화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전격적으로 SRF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5일 법원이 SRF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준

지 40여 일 만이다.

이 시설은 광주 등지에서 나온 가연성폐기물을 잘게 부수 만든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한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직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주민 반대로 멈춰섰다. SRF 발전소 가동 직후 강인규 나주시장과 공무원, 주민 등 20여 명은 발전소로 달려와 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난방공사 측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나주시는 이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발전소 연료인 SRF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강 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SRF 3만4000여이 쌓인 장성군 복합물류 터미널 현장을 긴급 방문,

"SRF 터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참담하다"며 연료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난방공사는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나주 SRF 발전소에서) 소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난방공사 측은 "SRF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라며 "나주시가 법원 판단마저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장성 아적장에 4년째 보관하면서 40억원이라는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난방공사가 "강 시장이 SRF 보관장소를 무단침입했다"며 형사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SRF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나주시, 난방공사 측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도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나주시,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2차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 등은 "문제의 본질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SRF 정책에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 등은 긍정적인 자세로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라 난방공사가 SRF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데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순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화순 백신기술센터 구축 탄력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남도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구축하는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 특구에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비 213억원 등 총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컨설팅부터 임상,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 장비의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 센터 구축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도는 센터의 조기 구축과 정상 운영을 위해 운병태 정무부지사를 주축으로 김원이 의원과 함께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 국회 복지위 심의를 통과, 국비 213억원 전액을 확보하게 됐다.

운병태 부지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안정적인 백신을 공급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임상시험 분석시스템 구축, 국제 인증 지원 등 백신 허브 기능을 수행할 백신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운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8일 나주혁신산단에서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등 기업 관계자들과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착공 행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체계 구축 박차

나주혁신산단서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 착공식

전남도가 지난 18일 나주혁신산단에서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터리 재사용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운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와 성환두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이태경 삼성SDI 상무, 박현용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오재혁 현대자동차 상무, 이진국 우진산전 상무 등 사업에 참여한 18개 기업·기관 등이 참석했

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지산업협회, 현대자동차,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우진산전, 에스텍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확보·제공 ▲배터리 성능·안전성 시험평가 및 해체·분류 장비 구축과 표준 개발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 운반·저장 가이드라인 등 마련 ▲연구개발, 응용제품 개발,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공동 연구

과제 기획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함께 한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9% 수준의 급성장예 전망되나,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가 환경·산업적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지난해말 기준 493개에서 오는 2030년 42만 개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배터리 성능이 70% 수준으로 떨어지면 전기차 동력원으로는 기능이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선박, 드론, e-모빌리티, 농어업용 전동기, 캠핑용 충전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사용·

재활용 기술이 부족하고, 잔존가치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표준이 없어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31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나주혁신산단 8602㎡ 부지에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를 구축한다. 입고시험동과 보관동, 환경시험동, 안전성시험동 등을 구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연간 전기차 배터리팩 1천 개 이상을 대응할 설비를 도입한다.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다양한 고부가가치 응용제품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8.2GW 해상풍력발전, 드론, e-모빌리티, 친환경 선박 등 이차전지 수요시장과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술혁신기반을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광양항 선박 입출항 AI가 자동 관리 시스템 개발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도선 자동 배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아이웍스, (주)시티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2021 데이터 플래그십 공모사업'에 참여, 국비 4억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안전한 항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기록, 위치 정보, 스케줄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예·도선을 위한 최적의 운항 경로와 대기 최단 시간을 도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점 해결에 활용한다.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선박-선사-항만' 간 입출항에 필요한 예선 서비스 통합 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 최단 거리 예선 배차 적용, 도선사와 실시간 자동 배정이 가능하다. 선사의 운영경비 절감과 바다 환경 오염도 개선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